

【법무담당관실 소관】

I.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

- 입법과정에 도민참여 및 법익보호 확대

- ◆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·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
- ◆ 정부입법의 제·개정 과정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경기도의 입장 적극 반영

□ 사업개요

- 입법예고의 철저 이행 및 예고 수단의 다양화로 의견수렴 체계 확립
- 정부 및 국회 입법동향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

□ 추진실적

- 제·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
 - 입법예고 : 총 96건 중 74건, 입법예고율 77%(2004년도 30%)
 - 주요 자치법규 일간신문 유료광고 병행 실시(7회)
- 입법예고의 개별통지제 실시
 - 관계 시·군, 기관·단체 등에 개별통지 및 의견청취 여부 심사시 확인
- 정부 입법동향을 입안단계에서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전파
 - 입법예고 동향 파악 및 소관부서 전파 : 매일 09:00
-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(행자부, 법제처)
 - 법령 제·개정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조회 확행
 - 입법예고기간 및 입법예고대상에 대한 기준 객관화·투명화

□ 향후계획

-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적극 이행 및 확인
-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에 대한 개별통지 확대
- 법령 제·개정 단계별 대응을 통한 경기도 의견 적극 개진

- 자치법규의 사후관리 강화

- ◆ 자치입법 심사체계 확립으로 능률적인 법제행정 서비스 제공
- ◆ 자체 Feed-Back 시스템을 가동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

□ 사업개요

- 현안사항에 대한 동향정보 적극 파악
- 계획적인 자치법규 정비체제 확립·운영

□ 추진실적

- 자치법규검토 시스템 구축
 - 자치법규안에 대한 내실있는 자체심사 : 96건(조례 60, 규칙안 36)
- 자치법규 정비체제 확립
 - 실·과별 자치법규 정비담당자(과장·주무담당) 지정하여 정부입법의 제·개정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
 - 자치법규 제·개정시 상위법령의 변동에 의한 필요적 조례규정사항 반영여부 점검
- 법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자료 종합 및 제공
 - 법령정보, 법률교육, 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정보·자료 제공
 - 맞춤형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 메일진 서비스 신청 권장

□ 향후계획

- 자치법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 제·개정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
-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실시 및 법제 검토 강화
- 법무행정정보 인터넷 서비스 확대

◆ 인터넷을 통한 법무행정정보 서비스 확대로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인터넷의 일반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법무행정정보 서비스 제공

□ 추진실적

- 자치법규 제·개정 내용 인터넷 서비스 실시
 - 전자도보를 통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내용 고지(74건) 및 자치법규 공포문 경기넷 게시
- 행정심판·소청심사 결과 인터넷(경기넷) 전파
 - 행정심판 재결사례 : 238건
 - 소청심사 결과 : 85건(직무불성실 55, 품위손상 10, 기타 20)
 - 소송관련 승·패소 사례 : 160건(민사 92, 행정 68)

□ 향후계획

- 경기넷 법무행정 사이트에 입법예고 사이트 개설·운영
 - 입법예고사이트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운영
-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결과 신속히 인터넷에 게재

-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

◆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의 운영으로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도민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

□ 기본방향

- 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방안 발굴 및 정착
-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행정 각 분야로 환류(Feed Back)

□ 추진실적

- 행정심판 처리
 -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: 10회 287건(인용 64, 기각 186, 각하 37)
 - ※ 인용율 22%(2004년 22%)
- 행정심판사건 주심제 운영
 - 위원회 개최시 외부 위촉위원에게 2~3건 정도의 주심사건을 배정,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결(⇒ 주심운영제 확대계획)
- 관계공무원 교육 등 환류를 통한 주민권리침해 사전예방
 - 관계공무원 시·군 등 순회교육 4회
 - 심판 재결례 등 주요내용을 「경기도 법이야기」에 4회 게재
 - 분야별 주요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경기넷에 게시(현재 총 238건 게시)
- 행정심판 재결서의 D/B화
 - 유사사건 처리시 업무의 능률성 및 재결의 일관성 제고
 - ※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「시·도 행정정보화」사업에 반영 추진중

□ 향후계획

- 행정심판의 공정성 강화 및 행정의 적법성 제고 기능 활성화
- 책임있는 소송수행체제 구축

◆ 소송 수행자의 책임감 강화로 대응의 충실성 제고

◆ 승·패소 사례의 공개로 행정의 신중성 제고 및 남소(濫訴)의 예방

☐ 사업개요

-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 확립
- 소송 결과를 행정의 각 분야로 환류(Feed Back)

☐ 추진실적

- 효율적인 소송수행
 - 대상 : 312건⇒확정 95건(승소 62, 패소 29, 기타 4), 계류 217건
 - 주요 사건별 대응방안 및 고문변호사 활용 지원
- 승·패소 사례의 전파, 교육 및 포상
 - 경기넷 게재 : 160건(민사 92, 행정 68)
 - 소송실무교육 : 2회 210명
 - 소송수행유공자 포상금 지급 : 31명 9,900천원
- 중요소송 관리 : 6건(민사 2, 행정 4)

☐ 향후계획

- 피소 사건의 효율적 관리
 -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도 및 지원
 -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
- 경기넷 등을 통한 승·패소 사례 전파로 올바른 행정처분 유도
-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철저(납부독촉, 재산추적 등)

-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

- ◆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로 공무원의 불이익 최소화
- ◆ 소청사례의 공개로 공무원 비위의 저감 및 처벌의 적정성 유지

☐ 사업개요

- 소청심사의 공정성 유지
- 소송 결과를 행정의 각 분야로 환류(Feed Back)

☐ 추진실적

- 소청심사 실시
 - 접수 : 165건 ⇒ 처리 : 149건(인용률 44%), 계류 16건
- 경기넷을 통한 소청 결정사례 전파
 - 인터넷(경기넷) 게재 : 85건(직무불성실 55, 품위손상 10, 기타 20)

☐ 향후계획

- 공무원 권익구제 및 비위의 사전예방

-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를 위해 연간 10회 이상 개최
- 소청사례 전파를 통한 공무원의 위법·부당행위 사전 예방
-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
 -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관용
 - 금품수수, 음주운전, 무사안일 등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, 고질적인 비위는 관용을 엄격하게 배제
-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향상 지원

- ◆ 법무 및 인·허가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 실시로 전문성 제고
- ◆ 법무행정 능력 배양으로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및 행정능률 향상

□ 사업개요

- 다양한 법무교육 기회 제공 및 선진 법무행정 연찬
-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으로 법무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제고

□ 추진실적

-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「경기도 법이야기」 발간
 - 발행부수 : 1만부(도, 시·군 공무원)
 - 수록내용 : 반복적인 행정심판 사례 및 각종 법령정보
- 법제처 공동주관 법률전문과정 교육실시(6. 13~6. 17.)
 - 대 상 : 198명(도 19, 시·군 179)
 - 내 용 :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, 행정심판, 행정절차법, 자치입법실무, 민법총칙 등
- 법무관련 공직자 업무능력제고 연찬회 실시(11. 2~11. 4. 3일간)
 - 대 상 : 46명(도, 시·군 법무관련 공무원)
 - 내 용 : 법제·행정심판·소송실무에 대한 분임별 토론, 행정절차·법령용어 한글화 등 전문강사 초빙 강의

□ 향후계획

- 권역별 시·군 순회법무교육 실시(11월중 2회 실시 예정)
 - 대 상 : 시·군 인허가 부서 및 법무관련 공무원(1,000명)
 - 내 용 : 자치입법·행정심판·소송실무에 관해 사례위주 교육
- 외국의 특색있는 자치법규집 번역 발간(12월중 발간 예정)

Ⅱ.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지 적 사 항	처 리 결 과
1	행정심판의 인용 건수가 10% 미만으로 줄어 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	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사례 교육(4회), 「경기도법이야기」에 반복되는 재결사례와 법령해석에 관해 통일을 기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지도·감독하겠음.